

## 레이저 과대광고 '물의' 관련원장 11명 관계기관에 회부 업무·자격정지 등 중징계 받을 듯, 윤리위원회 회의

레이저 기기 관련 과대광고를 일간지 등에 게재해 물의를 일으킨 원장 11명 전원이 관계기관에 회부될 전망이다. 선례에 비춰볼 때 실질적인 행정처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수구·이하 윤리위)는 지난 8월 17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일간지를 비롯한 언론 매체에 레이저 기기 관련 과대광고를 게재한 원장들의 징계 수위를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이날 윤리위에서는 해당 원장들이 제출한 소명서를 바탕으로 의료법 위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11명 전원을 관계기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소명서 미제출자 1명 포함)

관계기관으로 회부되면 의료법 위반 경중에 따라 업무 및 자격 정지 또는 과징금 추징 등의 중징계가 가능하다.

윤리위는 "해당 원장 중 대부분은 이미 지부 차원에서 과대광고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바 있으나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 일벌백계의 의미로 이 같이 결정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윤리위는 소명서 검토 과정에서 해당 레이저 업체가 레이저 과대광고를 유도한 정황 근거를 포착, 치협 고문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위법 여

부를 확인해 향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보통신위원회, 자재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와 공조해 정기적으로 과대광고를 조사하는 방안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치협 윤리위는 최근 레이저 관련 기기 과대광고 건이 물의를 일으키자 치협에서 자체적으로 의료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것과 더불어 지부를 통해 접수된 과대광고 건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수구 위원장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레이저 관련 업체에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다시는 회원들이 업체 상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치과계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법제이사는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 보호를 위해 하루 빨리 사태를 종결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거친 상태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위원들은 레이저 기기 과대광고와 관련, 일선 개원가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는데 치과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문제 많다" 치협 등 5개 의약단체, 국세청에 공동 탄원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유 연말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구축되고 의료기관에서는 모든 비급여 의료비 내역을 제공하도록 된 것과 관련 치협을 비롯한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5개 의약단체는 국세청에 공동으로 탄원서를 내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의약계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환자의 진료정보라는 특수성과 진료정보의 자료 집중기관에 대한 부분이라고 간주하고 이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구성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정보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국민의 기본 권리"라며 "만에 하나 특정 환자가 자신의 진료내역이 일체의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문제삼을 경우 제도 자체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해당 의료기관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약단체는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를 위해 ▲자료 유출에 대한 확실한 보안장치가 선결될 것 ▲자료제공 시 해당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 동의 절차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탄원서에서는 또 "진료정보의 자료 집중기관 유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하며,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자료집중기관으로 부적절하다"며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자료 집중기관을 거처도록 돼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타분야의 효율적인 자료수집과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의료비의 경우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유예기관을 두는 등의 특례적인 예외사항으로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탄원서에서는 특히 "의료비 자료 집중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엄격히 말해 비급여 의료부분과는 업무적으로 전혀 무관한 기관"이라며 "공단은 의료기관과 진료비 지급이라는 금전적인 부분은 물론 의료수가를 계약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을 감안할 때 자료 집중기관으로 더더욱 부적절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단체는 자료 보안차원에서 자료 집중기관의 유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불가피하게 자료 집중기관이 필요하다면 ▲비급여 의료비의 자료 집중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절대 불가하며 ▲자료 집중기관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의료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기관을 지정할 것과 ▲가능한 현재 의약단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보 포털시스템이 완성된 후 재논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청했다.



## “건보재정 정부예산 증액해야” “보수교육 축소 움직임 반대” 입장도 전달 안 협회장 등 의료계 단체장, 복지부장관과 면담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장들은 지난 8월 16일 유시민 보건 복지부장관을 만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증액을 요청하고 국무 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보수교육 축소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 단체장들과 면담형식으로 이뤄져 치협, 의협, 한의협, 약사회, 병협 등 5개 단체장들이 유 장관과 1시간에 걸쳐 의약단체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면담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협회장은 “지난 4월 입법예고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안)에 따라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 수준으로 (정부지원을) 한다면 예년에 비해 건보재정이 줄어들고 보장성 확대 등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 따라 보장성 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정부지원이 총재정의 25%로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단체장들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도 늘리고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제비도 적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담배값 인상을 통해 건강증진기금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함으로써 왜곡된 진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단체장들은 또 보수교육 개선방안과 관련, “의약인의 보수교육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의학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보수교육이 타 단체의 경우처럼 회원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규제하려는 정부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장들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보다 오히려 법정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등 보수교육을 보다 내실화 하는 방안이 합당하다”며 이를 위한 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장들은 또 면허관리나 갱신을 실시시험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이날 면담 결과에 대해 “시간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대체적으로 이야기가 잘 됐다”면서 “유시민 장관이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유 장관과의 면담에는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해 장동익 의협 회장, 원희목 약사회 회장, 엄종희 한의협 회장, 김철수 병협 회장 등 5개 단체장이 참석했으며, 노연홍 보건료정정책본부장,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등 복지부 관계자가 배석했다. 한편 보건료정단체장들은 이날 유 장관과 면담에 앞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간협 등 6개 단체가 수가계약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 연구결과를 갖고 공단과 수가계약에 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물방울 레이저 과대광고 등 현안 논의 치협 정기이사회

레이저 기기 과대광고로 치과계에 물의를 빚고 있는 해당 회원들이 재심 과정을 거쳐 조만간 관계기관에 회부될 예정이다.

치협 집행부는 지난 8월 22일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열고 물방울 레이저 과대광고 관련 논의를 비롯한 치과계 현안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 8월 17일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수구)에서 합의된 바 있는 물방울 레이저 과대광고 해당 회원들의 관계기관 회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이의가 있는 해당 회원들의 경우 재심 청구 과정을 거쳐 관계기관에 회부키로 했다. 해당 회원들의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 다시 윤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GPD제도의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소위원회를 해체하는 대신 치협 산하 특별위원회로 신설, 운영키로 결정했다. GPD제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수구 부회장이 맡기로 했으며, 간사에는 박영국 수련고시이사 가 선임됐다.

또 최근 MBC 드라마 ‘발칙한 여자들’에서 레이저 관련 기기를 간접 홍보하는 내용이 방영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시적특별재무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을 비롯해 ▲윤리위원회 규정 ▲직원인사및보수규정 개정의 건 및 여비 규정 ▲지부장회의 개최 ▲보건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지원대상자 결정 ▲SMS 문자 서비스 대회원 홍보 등이 논의됐다.

안성모 협회장은 “효율적인 치협 회무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임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